



국가직 7급 행정학

1. 총평

2. 출제영역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4
정책론	5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3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3	지방자치론	3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6	기출변형 문제	3	신유형 문제	1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맞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4	-	3	8	-	-	6

01 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②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 ④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해설】 ③ [X]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가치(value)와 사실(fact)을 구분하여 검증이 불가능한 가치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하고, 사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다.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논리실증주의를 행정의 연구에 도입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에서 계량적 방법에 따른 분석을 특징으로 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20



02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② [X] 모스카와 미헬스, 파레토는 대표적인 고전적 엘리트론자이며, 밀즈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의 명성적접근법 역시 미국의 대표적인 엘리트 이론에 해당한다. 신엘리트이론은 밀즈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의 명성적접근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의사결정권력을 도입하였다.

▶ 올바른 지문

-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 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무의사결정권력을 도입하였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20



- ③ 회사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 ④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57, 265

▶ ②

법령 문제

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 ②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③ [O]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각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④ [X]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동법 제4조 【공공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올바른 지문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summary | 공공기관의 구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공기업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정원 50인 이상)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85%) 이상인 기관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② 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정원 50인 이상)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③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80

▶ ④

06 정책 평가와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 ④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① [X]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다.
 ③ [X] 호손효과에 관한 것으로 호손효과는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다.
 ④ [X]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즉,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이 높은 평가는 내적 타당성을 갖춘 것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 ④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내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96~300



07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 ②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 ③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 ④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 ① [X] 정책혁신이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과 예산이 완전히 없는 '無'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② [O] 정책종결은 기존 정책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업과 자원 예산을 중단하거나 대체할 다른 수단을 찾지 않는 경우이다.
 ③ [O] 정책목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경우(정책목표 : 과속 단속으로 동일함. / 정책내용 : 경찰관 현장 단속 →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이므로 선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O] 정책유지는 현재 정책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도 없고, 이전에 관여한 것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09



| 내용분류 + 개념 |

08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개념으로 유인가(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을 제시하였다.
- ㄴ.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 ㄷ.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 ㄹ.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누고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 ㅁ.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해설】 동기부여 이론은 인간의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론과, 인간의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동기유발되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 ㄱ [O] 브룸(Vroom)의 (V.I.E) 기대이론으로 과정이론이다.
- ㄴ [O] 해크맨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직무특성이론은 주로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으로 구분하지만, 과정이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ㄷ [O] 아담스(Adams)의 공평성(형평성) 이론으로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 ㄹ [X]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으로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 ㅁ [X]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 이론으로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91



09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 ② 내용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 ③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 ④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test-retest)과 동질이형법(equivalent forms) 등이 사용된다.

【해설】 ② [X] 시험이 실제 시험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은 기준타당성이다. 내용타당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문제의 부합정도를 말한다.

▶ 올바른 지문

② 기준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summary | 시험의 타당성

기준타당성	① 개념 : '시험성적 = 직무수행 실적(직무수행능력)' ② 검증 ㉠ 예측적 타당성 검증 : 시험합격자의 시험성적과 근무를 시작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평가한 근무실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동시적 타당성 검증 :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시험성적과 그들의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내용타당성	① 개념 : '시험내용 = 직무능력요소' ② 검증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과 직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검증
구성타당성	① 개념 : '시험내용 = 이론적 구성요소(추상성이 강한 능력요소)' ② 검증 ㉠ 구성타당성에서는 고도의 계량적 분석기법을 동원함. ㉡ 구성된 능력요소가 현실성 있고, 직무수행의 성공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시험의 내용과 '구성된 능력요소' 사이의 관계를 분석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98, 499



10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 ②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 ③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해설】 ④ [X] 총액인건비 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조직관리기관이 총정원과 인건비예산의 총액만 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인력운영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 올바른 지문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를 줄이고,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조직(기구), 정원, 예산, 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35



11 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절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 ②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 ③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 ④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해설】 ④ [X] 의존재원은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결정·실현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를 저해(촉진×)하게 된다.

▶ 올바른 지문

④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의 저해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60



12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ㅁ. 등록면허세	ㅂ. 주세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ㅁ
- ④ ㄹ, ㅂ

【해설】 ④ [O]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ㅂ. 주세이다.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ㅁ.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summary | 조세의 종류

국 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13, 863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90일	40일	30일
②	90일	50일	30일
③	120일	50일	40일
④	130일	50일	30일

【해설】 ③ [O] 국가재정제도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하고 지방재정제도의 경우 광역단체는 50일전, 기초단체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ummary | 국가재정 VS 지방재정

구 분	국가재정제도	지방재정제도
예산과정	회계연도 120일 전 제출, 30일 전 의결	광역단체 50일 전 제출, 15일 전 의결 기초단체 40일 전 제출, 10일 전 의결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12



1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 ②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의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③ 칼도- Hicks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 ④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해설】 ① [O] 잠재가격의 설정은 시장가격을 믿을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편익·비용의 화폐가치에 대해 주관적 판단을 하는 절차로 측정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② [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③ [X] 칼도- Hicks(Kaldor-Hicks)기준은 어떠한 자원배분의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기준으로 능률성에 대한 이론적 기준이 된다.

④ [O]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정책대안들의 편익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량적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체계적 분석수단이다.

▶ 올바른 지문

③ 칼도- Hicks(Kaldor-Hicks)기준은 능률성에 대한 이론적 기준이 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39, 241~245



15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① [O]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② [O]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③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변보호, 신분보장 등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④ [X]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2003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 올바른 지문

④ 공직자 행동강령(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60, 570, 571, 575



16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X]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X]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동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4. 지방채의 차환

③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 [X]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X)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79

▶ ③

| 말 바꾸기 |

17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 ②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 ③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 ④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 【해설】 ① [O] 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1989년 세계최초로 시행되었다.
- ② [O] 참여예산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참여범위의 한계로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논의되었으나 최근 중앙정부로까지 확대되었다.
- ③ [X], ④ [O]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강조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참여예산제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강조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09

▶ ③

18

| 개념 + 말 바꾸기 |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 【해설】 ① [X] 미국은 건국초기에서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이중연방제라 불리는 시기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호작용이 최소화되어 있었으며 두 계층의 정부는 상호작용 없이 독자적인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 ② [X]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은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부여된 자치권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으로, 위임된 사항 이외의 포괄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
- ③ [O] 영국의 경우 개별적 수권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④ [X]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형 체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지방분권화를 통한 중앙집권형 체제의 개혁에 착수하였다(기관위임사무 폐지, 조직 및 인사 규제 완화, 세원 이양 등).

▶ 올바른 지문

- ① 미국은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은 독자적이었다.
-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부여된 자치권만을 행사하게 된다.
-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지방분권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 왔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20, 890 /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20, 21

▶ ③

19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해서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①, ③ [O] 민원행정은 행정이 국민과의 직접적 교호작용을 통해 행정산출을 현실화하며, 고객의 특정적 요구의 투입에 대한 산출로서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이 발생하고,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O]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④ [X]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올바른 지문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62

▶ ④

20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 ③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제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해설】 ① [X]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가재정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O] 국가재정법 제91조

동법 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③ [O] 국가재정법 제92조

동법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O] 국가재정법 제89조

동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올바른 지문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08, 609, 620

